




한우안테나 NEWS

◎ 소 부산물 거래제도 개선 절실

전국한우협회 남호경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회장, 서울축공 중도매인연합회 정용근회장은 현재 공판장에서 수매거부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소 부산물 거래제도 개선 및 근출혈·수종발생우에 대한 처리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용근회장은 “소수의 인원이 서울축공에서 거래되는 소 부산물을 전량 수매하면서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부산물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넓은 판매망을 갖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대거 경매에 참여한다면 적절한 부산물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호경회장은 “그 동안 77명의 서울축공부산물 거래상인들이 장기간 독점해오면서 수매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등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가들에게 불합리한 현 제도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고, 한우협회 측도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농가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호회장도 “세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만에 하나 농가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2004년 11월 4일자]

◎ 한우 소비침체 출구 찾아라

국내 경기 불황과 맞물려 한우고기 소비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우관련기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소비 홍보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한우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육류로 소비를 대체하고 있다.

한우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장기 한우고기 소비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우자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한우홍보 강화와 불법둔갑판매 차단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자조금 대의원선거와 관리위원회 발족 등 한우자조금 운영기반을 갖춘 후 대대적인 소비촉진행사를 통해 소비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신문 2004년 11월 4일자】

◎ 유통 투명화 정부·업계 ‘한목소리’

한우 유통 투명화에 대해 업계와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림부와 한우협회, 농협중앙회의 관계자들은 지난 11월 10일 농림부 회의실에서 최근 한우협회 측에서 제시한 ‘농업농촌발전종합대책-한우분야’의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우의 유통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우협회는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시행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였고 이에 농림부는 한우협회의 의견에 동의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부의원들의 완강한 반대로 잠시 주춤하고 있는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추진이 다시 한 번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생산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우 모니터링제, 음식점 인증제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져 시행 전망을 밝게 했다.

【축산신문 2004년 11월 19일자】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소비자단체도 팔 걷어

수년째 표류 중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도입을 위해 소비자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다.

10개 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음식점 육류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소비자단체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올 1월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 및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만 79곳에 달하고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둔갑판매에 의한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등 쇠고기 안전성에 의구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단체들은 이 제도 도입을 96년부터 강력히 요청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올해도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지만 단속의 실효성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박인례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쇠고기의 70-80%가 수입산이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한우라고 알고 먹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전달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제도는 둔갑판매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음식점을 제외하면 소비자와 양심적인 사업자 모두 win-win 하게 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민신문 2004년 11월 22일자】



◎ 한우고기 먹기 '큰 부담'

농림부는 지난 11월 18일 “쇠고기 소비행태 및 소비자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국대학교 한성일교수 연구팀이 쇠고기 소비실태 및 향후 소비의향과 함께 한우 사육농가의 사육동향을 분석해 한우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우리 소비자들은 현재가격에 대해 96%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우고기의 적정가격에 대해 kg당 1만8천3백17원이라고 답했다.

현재 한우고기의 가격이 kg당 3만원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는 부담을 느끼며, 더군나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앓아진 소비자들의 지갑사정으로는 한우를 먹는 것이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우려했던 웰빙(Well-being)문화로 인한 육류소비 기피현상은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신문 2004년 11월 20일자】

◎ 육질 우수 보증종모우 7두 선발

가축개량협회 한우분과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 한우 보증종모우를 선발해 내년 1월부터 정액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보증종모우는 KPN494, KPN479, KPN496, KPN521, KPN511, KPN478, KPN502까지 총 7두. 특히 이번에 선발된 종모우 중 KPN494는 도체중, 배최장근 단면적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전체 8위의 성적으로 보증종모우에 선발, 향후 개량에 폭넓게 쓰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KPN 496과 511은 도체중의 성적이 높고, KPN521은 근내지방도 성적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된 7개 종모우들은 여느 때 보다 형질이 우수한 것들이 선발되었다”며, “특히 KPN494의 경우 기존의 종모우와 비교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육량 및 육질면에서 우수한 형질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벌써부터 농가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2004년 12월 30일자】

◎ '가짜 한우' 판매업소 강력 규탄

가짜 한우고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한우업계가 불매운동을 천명하는 등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등에서 한우허위표시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시료가 한우고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체는 한국까르푸 안양점과 야탑점·일산점과 경방필백화점은 영등포점 등이다.

이에 한우협회와 한우농가들은 지난해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우수 유통업체로 선정된 까르푸가

이같은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해 농림부장관 표창 자진반납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할 경우 불매운동 전개 및 규탄대회 개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까르푸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같은 작업대에서 한우와 육우를 함께 가공하면서 일부 육우가 한우에 섞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3개 매장에서 둔갑판매가 일어난 것에 대한 해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한편, 한국 까르푸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부장 및 과장급 매장관계자 7명 등을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어민신문 2005년 1월 6일자】

◎ 남미産 쇠고기 들어올 듯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장기화되자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아르헨티나 등 남미産으로 눈을 돌리면서 남미産 쇠고기 수입이 예고된다.

쇠고기 수입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체들을 중심으로 남미에서 현지답사가 진행되는 등 수입업체들의 남미産 쇠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미産 쇠고기는 생산비가 저렴하여 가격이 싸고 질도 우수하여 국내 수입업체들의 요구 사항을 맞춰줄 수 있는 등 맞춤 생산도 가능해 새로운 쇠고기 수입국가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란 것.

특히 올 10 11월경 국내에 보유된 美産 쇠고기의 유통기한 2년이 경과돼 美産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입 경로를 알아 봐야 할 절박한 상황에 업체들의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농어민신문 2005년 1월 6일자】

◎ ‘쇠고기 이력추적제’ 소비자 반응 좋다.

소비자 대부분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9개 한우 브랜드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정착시키고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최근 소비자 687명을 대상으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7.8%에 달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 시기에 대해 ‘바로 도입’란 응답이 67.4% 1년 후 22% 2년 후 6.8% 3년 후 1.9% 등의 순.

이번 조사 결과 쇠고기 구입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안전성 40.5% 신선도 28.1% 등급 12.8% 가격 8.2% 부위 6.8% 용도 3.6% 등의 순으로 꼽았다.

【농민신문 2005년 1월 7일자】



◎ 유해물질 잔류시 6개월 출하 금지

항생제 등 유해물질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출하제한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이달 5일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잔류위반농가가 출하한 가축에 대해 도축후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육출하를 금지시키는 규제검사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긴급도살·화농·주사자국 등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가축 또는 그 생산물에 대해서도 최근 잔류량 검출이 우려되는 설파모노메톡신과 엔로플록사신의 잔류 여부도 조사한다. 특히 모니터링 간이정성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당시 함께 사육하고 있는 다른 가축에 대해서도 정량검사완료까지 도축장 출하가 제한된다.

【농어민신문 2005년 1월 10일자】

◎ 美, 쇠고기 수출공세 거세질듯

미국 정부가 오는 3월7일로 예정된 캐나다산 소의 수입 재개에 앞서 한국·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자국의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캐나다산 소 수입 재개 앞서 협상 요청할 듯=앤 베네만 미국 농무장관은 지난 1월 10일 미국농민연맹(AFBF) 회의에서 광우병으로 중단된 캐나다산 소의 수입을 오는 3월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미만인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일본도 광우병 발생에서 비롯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3월 이전에 우리나라에 자국산 쇠고기 교역 재개를 위한 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우리나라와 가진 통상장관 협상에서 일본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를 토대로 자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관련 협상 요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협상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2005년 1월 14일자】

◎ 가축 사육의욕 ‘꾸준’

올 축산물의 경기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축산농가의 사육 의욕은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전국 한·육우 298가구와 젖소 115가구, 돼지 189가구, 산란계 92가구, 육계

94가구 등 모두 788가구(응답 186가구)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을 통해 '가축 사육 의향'을 조사한 결과 산란계의 경우 86%가, 젖소·육계가 각각 79%, 돼지는 69%, 한·육우는 57% 순으로 '지금의 사육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앞으로 사육 규모를 늘리겠다'는 응답자는 한·육우가 전체의 32%로 가장 높았고 돼지는 23%, 젖소는 14%, 산란계·육계는 각각 7%로 조사됐다. 반면 '사육 규모를 줄이겠다'는 응답자는 한·육우의 경우 전체의 11%, 돼지는 8%, 젖소·산란계는 각각 7%, 육계는 14%에 그쳤다. 하지만 이 중에서 한·육우 농가의 사육 감소 의향은 전년(5%)보다 갑절 이상, 육계는 전년(4%)보다 3배 이상이나 늘었다.

【농민신문 2005년 1월 12일자】

◎ 축산업등록제 참여 '탄력' 받는다

정부가 올 연말을 시한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사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1층 건축면적 비율)을 상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축산업등록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 기준 등록률은 전체 대상농가 3만9,824농가 중 24.1%(9,612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20일 이후 등록 농가도 많아 실제 등록농가는 1만여 농가로, 당초 지난해 말까지 목표한 등록률 25%를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률은 한·육우 38%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며, 종돈·종계 등 종축업은 이미 97%의 등록을 보여 사실상 등록을 마친 상태다.

등록률이 이처럼 높아지고 있는 것은 축산업등록제 시한이 오는 12월26일로 다가오고 있으며 축산환경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환경을 중시해온 농가들이 등록에 적극 참여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등록시 정책자금 지원 우선 순위에서 밀리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건설교통부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20% 이하로 돼 있는 건폐율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 등록률이 더욱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농림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농민신문 2005년 1월 12일자】

◎ “매주 수요일은 전국일제소독의 날”

농림부는 올해도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소독 실시로써 악성질병 재발방지에 나설것을 당부.

특히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소독을 소홀히 할 우려의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을 동원, 소독



함으로써 일제소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52회 중 21회에 걸쳐 공동방제단을 동원,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약품은 30회분을 공급하되 21회분은 공동방제단에서 사용하고, 9회분은 공동방제단을 통해 농가에게 공급하게 된다.

이같이 일제소독에 동원되는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소독약품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1백89억5백만원(축발기금 1백23억8천2백만원, 지방비 65억2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백30만4천6백만원, 소독약품비 58억5천9백만원이 쓰이게 된다. 공동방제단 편성·운영은 시장·군수, 읍·면장(총괄:시·도지사)이 하고, 소독약품 구매는 농협중앙회(축산건설팀부), 공급은 지역축협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축산신문 2005년 1월 12일자]

◎ “설 대목 소비자 이목집중 악영향 우려”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1월 7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서 긴급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유통할인점에서의 둔갑판매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한우자조활동자금 대의원 총회 개최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회장단 일동은 둔갑판매가 어느 한 업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쇠고기 유통망에 걸쳐 만연돼 있는 것에 의견을 모아, 이를 뿌리 뽑지 않고 한우산업의 미래가 없음을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뜻을 모았다.

우영목 부회장은 “이번에 적발된 곳은 운이 좋지 않아 적발된 것”이라며, “둔갑판매가 전 쇠고기 소비루트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석재 충북도지회장 역시 “정부에서 아무리 브랜드 사업을 열심히 해도 지금같이 유통질서가 엉망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영한 경북도지회장은 “이번 사건을 조용히 넘어간다면 또다시 둔갑판매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협회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라 역설했다.

반면, 김상준 전북도지회장은 “일년 중 가장 소비가 많은 설을 앞두고 너무 큰 목소리는 내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유통업체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신중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회장단 일행은 회의를 마치고 이번에 적발된 까르푸 본사를 항의 방문,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신문 2005년 1월 12일자]

◎ “광우병 보도에 한우사진 사용하다니...”

캐나다 광우병 관련 보도에 한우사진이 사용되어 한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월 12일 KBS의 캐나다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상황에서 앵커 뒤편 사진에 한우를 게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메스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실수는 한우소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 외에 소비자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한우사진계제, 살처분, 매립 등의 장면에 대한 사용에도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말 미국 광우병 사태로 인해 국내 소비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바 있다”며, “이는 우리 소비자가 안전성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메스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신문·방송 등의 언론매체들은 이들 문제를 다룸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2005년 1월 17일자]

◎ “한우고기 사랑” 114전화광고

전국한우협회와 농협 중앙회는 산지 소값의 하락을 막기 위해 이달 말로 끝나는 ‘114서비스’를 통한 한우고기 소비 홍보 캠페인을 오는 3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을 대상으로 국내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114안내 대기시간 중 ‘우리 입맛엔 한우고기가 최고입니다. 한우고기를 드십시오. 한우사랑은 농촌 사랑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서비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되어 왔다.

[농민신문 2005년 1월 19일자]

◎ 백화점·할인점 포장육 원산지등 표시 의무화

2월부터 백화점과 할인점의 정육판매코너와 일반 정육점은 자체 포장육을 판매할 때 원산지·부위명·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한 데 이어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주일에서 한 달간 영업정지를 받거나 하루 기준 6만 83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유통업체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포장육을 판매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농민신문 2005년 1월 17일자]

◎ '한우능력평가' 참가신청 2월말까지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는 오는 2월 말까지 2006년 10~11월에 개최될 예정된 '제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여 희망농가 신청을 받는다. 참여 농가는 출품 대상우 3마리를 선정해 브랜드 부문과 농가 부문 중 한 부문에만 신청할 수 있다. 출품우는 2004년 5월1일~7월31일에 태어난 혈통등록된 거세우로서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 도축 체중이 550kg 이상이어야 한다. 참가비는 50만원이다.

희망농가는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www.aiak.or.kr)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팩스(02-522-0171)나 우편(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2월28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농민신문 2005년 1월 24일자】

◎ 대한제당 무지개사료 양창근 상무 전무로 승진



대한제당 무지개사료가 올해 국내외 축산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도약하고자 지난 1일부로 사료사업본부장인 양창근 상무를 전무로, 김영식 품질경영기획팀장을 사료사업담당 상무로 승진시키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양창근 (49 .사진) 전무는1980년 서울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대한제당에 입사한 후 영업 및 마케팅, 연구분야에 근무해 왔다. 또한 근무중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돼지의 호흡기질환에 대한 연구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양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해 축산분야 전문지식뿐 아니라 경영관련 지식도 두루 갖추고 있다.

양창근 전무는 “올해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 지원과 우수한 제품개발로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 플러스는?

(주)덕창농축산 축산사업부는 한우농가의 걱정거리인 송아지 설사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Farm Tech사에서 생산한 마이크로 플러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플러스의 고농축 유산균은 송아지 장내에서 빠르게 증식되어 유해 세균이 장내에 서식하지 못 하도록 하여 송아지 설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장효과가 있어 증체 및 번식성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본 제품은 전국한우협회의 협조를 받아 한우 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품 구매를 희망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회원들께서는 (주)덕창농축산 축산사업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창농축산 / 전화: 02-586-2351